

與 “4차 추경 다음달 18일 처리”... 이낙연 “아특별법 최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폭 넓게 지원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포함 대출이자 유예시한 9월 연장안도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코로나 19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안을 오는 3월 18일 처리할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날 이낙연 당대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

별법, 규제샌드박스 5법 등이 차질 없이 상정·처리 됐으면 좋겠다”며 “제주4·3특별법은 73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역사의 큰 가락을 잡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외에도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폭 넓게 지원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고용 한파의 영향을 크게 받은 청년과 여성에 대한 일자리 대책도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안을 확정해 3월 중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방역뿐 아니라 피해계층 지원, 고용약화 방지에 핵심이 있다”며 버팀목 자금 상황, 전기요금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 등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또 의총에서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꼼꼼한 지

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경만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출이자 유예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서는 “9월 정도까지로 연장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당 정무실장인 김병배 의원은 “우리나라 필수노동자가 190만명 가량인데 안전 분야 비율이 높은 만큼 백신 우선접종을 고려하고 ‘안전 수당’ 명목의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지원금 규모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서삼석 의원은 관광·문화예술과 함께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 다행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안은 오는 28일 고위당정회의에서 확정된 뒤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내달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서울 국가안보실장, 유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연합뉴스

유영민 “文대통령 ‘신현수 사의’ 조만간 결론”

靑 비서실장, 국회 운영위 출석... ‘검찰 개혁 속도 조절론’ 선 긋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과 관련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질의에 “수 차례 구두로 사의 표명이 있었고, 그 뒤에 문서로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에게 일단 모든 걸 일임했다. 이렇게 (일단락했다)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수리가 될 수도 있고...”라고 밝혔다. 또 신 수석의 사표가 반려되거나 철회된 것이 아니므로 일단락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통령께서 고민하고 결심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만큼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감사장 인사 승인 및 발표 과정에 대해서는 “2월 7일 법무부에서 발표하지 않았느냐. 2월 8일 전자결재로 재가를 했다”며 “정부 인사 발표 시간이 2월 9일이다. 통상 그렇게 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이와 함께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과

관련한 국민의힘 광상도 의원의 질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속도조절을 당부했다”며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유 실장에게 “대통령께서 정당한 위임이 ‘속도 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실장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해보겠다”라며 “정확한 위임은 그게 아니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저도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쓴 적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2일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복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착수 민주당-열린민주당-시대전환 참여

4·7 재보궐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시대전환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단일화와 관련, “후보들의 의견과 다른 당의 상황, 다른 당 후보의 입장을 잘 감안하면서 성사 여부를 잘 판단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자는 공약이 있었다”고 전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과 함께 하는 3당 간의 서울시장 후보 3자 단일화 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단일화 방식을 사전논의한 뒤, 내달 1일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되는대로 곧장 절차를 밟겠다는 구상이다. 선거 출마를 위한 현직의원 사퇴 시한(3월8일) 이전에 단일화하는 게 목표다. 열린민주당 후보인 김진에 의원은 TV토론회 배심원 판정, 여론조사, 국민참여 경선 등이 혼합된 2011년 ‘박영선-박원순’ 모델을 주장하고 있고, 조 의원은 ‘정책경연’ 단일화를 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비례대표 25% 호남 인사로”

호남 민심잡기 총력...주호영, 이변주 전북·광주·전남 순차 방문

국민의힘은 24일 국민통합위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의원 4분의 1을 호남지역 인사로 우선 추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 첫 회의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국민통합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 호남지역 사람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70년대 김대중 박정희 두 후보의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호남이 하나의 이단적 지역처럼 분열돼 (보수정당인)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40여년 동안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또 “호남에서는 내게 자신들의 한(恨)을 풀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한다”면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으로 변했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야만 진심으로 국민통합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는 인

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회의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유력권인 20위 이내에서 4분의 1을 호남 지역 인사로 우선 추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추천제도는 의원 총회와 비대위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설명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말 호남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김종인 위원장도 전북, 광주, 전남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자체 자매결연·예산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정 위원장은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상설위원회로 국민통합위를 설치하고 ‘호남 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을 여는 등 ‘호남 민심 잡기’에 힘쓰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광주 5·18 묘역을 찾아 추모탑에 헌화하고 사죄의 뜻으로 15초기량 무릎을 꿇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소병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해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규정 등을 두어 박람회 실행과 사후활용을 위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다. 특히 2013년 첫 박람회 이래 10년 만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변화한 정원문화와 정원에 대한 인식, 기대역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원의 치유적 기능이 강화된 점을 반영해, 박람회의 사후활용 방안으로 ‘편린시설과 부지를 이용한 정원치유, 건강·체력 증

진 및 체육활동 사업 수행’을 명시했다. 또 목적 조항에 ‘모든 사람들의 일상 생활 속 자연환경과의 조화’,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적 삶 영위’를 추가해, 박람회를 통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소 의원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반조성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박람회 준비의 물적 포석을 다졌다면, 특별법 발의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명시한 법적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오피스텔, 신축부지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득
-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9㎡(구. 14평)
- ▶ PF 28억 확정, 지하 1층 공사 중
- ▶ 매매 - 20억(토지 17억 + 공사비 3억)

문의. 010-3605-5000